

신남방정책과 아시아 주요국 진출환경

I. 신남방정책과 아세안 · 인도	1
II. 아세안 · 인도에 대한 투자 현황	3
III. 아시아 주요국 진출환경	5
1. 베트남	5
2. 인도네시아	7
3. 인도	9
4. 아시아 주요국 진출환경 비교	12
IV. 아세안과 인도의 과제	15



해외경제연구소 공식 모바일 앱
• 최신 연구자료 실시간 업데이트
•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해외경제정보'로 검색

작성: 선임조사역 김찬수 (6255-5704)
avik@koreaexim.go.kr

요 약

I. 신남방정책과 아세안·인도

- 포스트 차이나로서 아세안·인도, 신남방정책으로 매력 재부각

II. 아세안·인도에 대한 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해외투자는 대 중국 투자를 지속 상회
- 우리나라의 대 인도 해외투자는 2017년에 자동차 등 위주로 크게 증가

III. 아시아 주요국 진출환경

베트남

- 정치·치안 환경은 비교적 안정적, 경제성장률은 6%대의 높은 성장세 지속, 사업환경은 중국보다 나은 수준

인도네시아

- 민주화 진전으로 정치·치안 환경 개선,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아세안 GDP의 약 37% 차지, 인도네시아 사업환경은 중국 추월

인도

- 세계 2위의 인구와 6위 규모 GDP를 바탕으로 고성장세 지속, 인도의 투자 환경은 아직 열악한 편이나 정부의 개혁정책으로 개선 기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사업환경과 정치·치안 환경은 중국보다 나은 수준

인도는 사업환경과 정치·치안 수준이 아직은 걸림돌이나, 대규모 내수시장과 높은 성장률, 집권당의 2019년 총선 승리 전망 등을 감안한 진출전략 유효

IV. 아세안과 인도의 과제

아세안은 로힝야족 사태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정치외교적 이슈해결에 한계 노출

인도는 취약한 보건의료 부문 및 교육 부문 투자 부족, 유가상승에 따른 원유 수입 증가 등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확대 현상 재발 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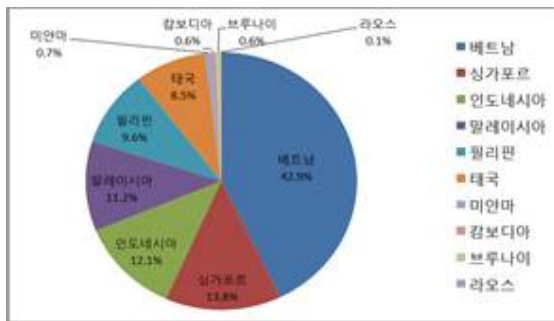
I. 신남방정책과 아세안·인도

□ 포스트 차이나로서 아세안·인도, 신남방정책으로 매력 재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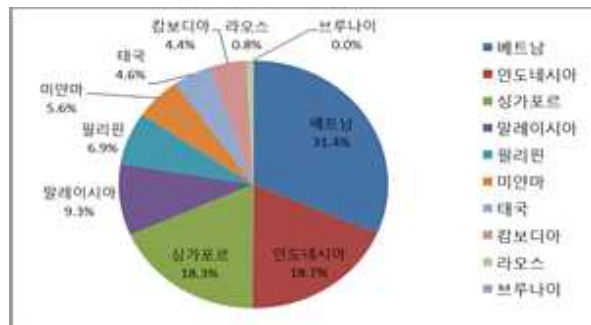
- 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형성하여 평화와 번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기 위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신남방정책은 2017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순방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밝힌 후 본격화되었다.
-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사람(People: 다양한 계층의 인적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의 확대), 평화(Peace: 교통, 에너지, 수자원,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선순환적 상호 번영 모색), 상생번영(Prosperity: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구축,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 협력) 공동체라는 3P 공동체를 제시하였다.
- 즉, 아세안 등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 강국과 같은 수준으로 격상하는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인도와의 인적·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신남방지역을 우리 경제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지역공동체를 구축하자는 정책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아세안과 상생형 경제협력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제조업 위주의 협력에서 소비재, 서비스, 신산업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2015년 12월 31일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시켰으며 그간 관세철폐가 유예되었던 후발국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도 2018년 1월 역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하는 등 단일시장을 지향하고 있다.

- 아세안의 국내총생산(GDP)은 2017년 약 2조 7,615억 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규모이며, 영국이나 인도보다 큰 수준이다.
-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비교적 경제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5개국은 ‘아세안-5’ 라고 불리며 아세안 GDP의 약 84%를 차지한다.
- 또한 동 5개국은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수출, 교역, 누적 해외투자에서 각각 86%, 84%, 71%를 차지하는 등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 한편, 인도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다변화되어 있으며, 세계 2위의 인구 규모를 바탕으로 대규모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여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
-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의 교역 및 투자 비중, 해당국의 잠재력을 감안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국가별 교역 비중(2017년)



<그림 2>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국가별 투자 비중^{주)}



주: 2017년 말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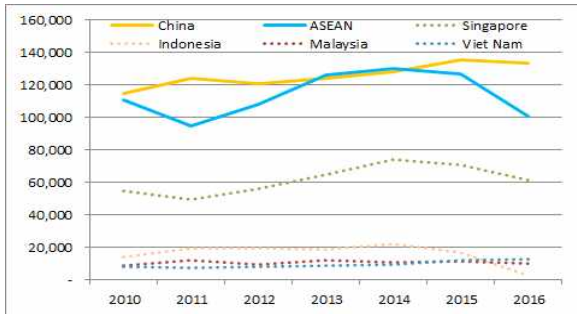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II. 아세안 · 인도에 대한 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해외투자는 대 중국 투자를 지속 상회

- 중국의 임금 상승, 사드 보복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 등 투자 매력도 저하로 인해 투자자들이 포스트 차이나(Post China)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이 부각되고 있다.
- 아세안 인구는 2017년 기준 약 6억 4천만 명으로 중국의 약 절반 수준이나, 동남아의 중위연령(Median Age)이 28.5세로 중국의 37.0세에 비해 낮다.
- 즉, 중국보다 젊은 노동력의 비중이 높고 그 만큼 성장잠재력이 크다. 경제성장률은 중국에 비해 다소 낮으나 2008년 이후 최근 10년간 연평균 5.1%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도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였다.
- 아세안은 약 6.4억 명의 인구와 2.8조 달러의 GDP를 기반으로 중산층 증가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 전세계 기준으로 2011년~2016년 중 아세안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은 총 7,976억 달러로 연평균 1,139억 달러 수준이며 중국 앞 FDI 유입의 90% 수준에 이른다.
 - 특히, 2013년과 2014년에는 아세안의 FDI 유입이 중국의 FDI 유입을 상회한 바 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013년을 제외하면 2010년부터 매년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해외투자는 대 중국 투자를 상회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대 중국 투자 감소세와 대 아세안 투자 증가세로 이러한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 특히, 2014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는 33.3억 달러로 대 중국 투자(32.0억 달러)를 추월하였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그림 3> 전세계의 대 아세안 및 대 중국 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CTAD,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그림 4>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및 중국 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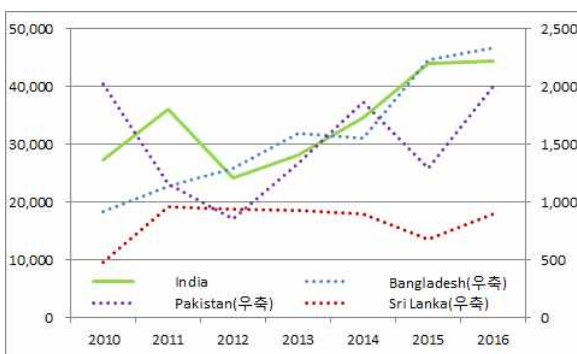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대 인도 해외투자는 2017년에 자동차 등 위주로 크게 증가

○ 우리나라의 인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자동차, 1차 금속, 식료품, 기계장비 등 제조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금액은 2017년 12월 말 누계 기준 49.0억 달러(법인 수 977건)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제18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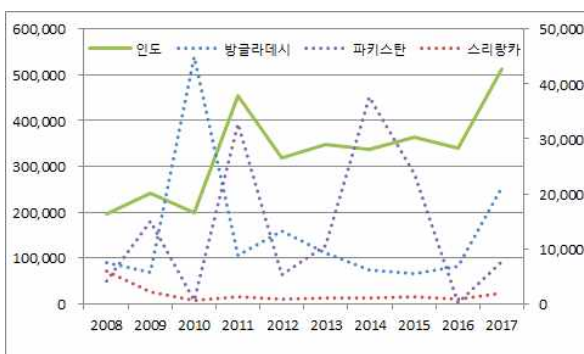
- 2017년 인도에 대한 투자금액은 자동차, 식료품 등 제조업 위주로 5.1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신규 법인수도 112건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하였다.

<그림 5> 전세계의 대 인도 등 남아시아 국가 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CTAD,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그림 6> 우리나라의 대 인도 등 남아시아 국가 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Ⅲ. 아시아 주요국 진출환경

1. 베트남

□ 정치·치안 환경은 비교적 안정적

- 베트남은 공산당(CPV) 체제 하의 안정적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베트남은 당서기장, 총리, 국가주석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집단 지도체제를 표방하고 있다. 2016년 1월 제12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서기장 유임 및 여타 지도부 내정후 동년 5월에 국회가 지도부를 공식 교체하였다.
- 당서기장은 온건 중도파인 응우옌 푸 쩡이 유임되었으며, 국가주석은 개혁파인 쩌 다이 쩡이 선출되었고, 총리는 개혁파인 응우옌 쑤언 폭이 선출되었다.
- 당내 개혁파와 보수파 간 갈등이 존재하나 정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며, 사회적으로도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세력이 미약하여 상당기간 동안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7년 6월 형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 정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
- 만연한 부패가 공산당의 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2017년 9월 PetroVietnam 전 회장 사형선고 등 뇌물사건을 강력하게 다루고 있다.

□ 경제성장률은 6%대의 높은 성장세 지속

- 베트남은 전자 부문 등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힘입어 제조업 부문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 베트남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 등으로 FDI 유입은 2011년 75억 달러에서 2016년 126억 달러로 증가했다.

- 경제성장률은 2016년에는 평균 12.4%의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민간소비 진작,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및 지역경제 통합에 따른 수혜 전망 등으로 FDI가 증가함에 따라 6%대의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 2017년 경제성장률은 광업 부문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수출지향적 제조업 부문 호조와 함께 민간소비 증가와 FDI 유입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된 6.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18년에도 제조업 부문 수출 호조와 함께 견조한 내수 등에 힘입어 6.6% 수준의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베트남은 경제통합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EU와 체결한 FTA를 2018년에 발효할 예정이다.
- 또한, 미국의 TPP 탈퇴 이후 일본,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he Trans-Pacific Partnership)을 추진하고 있다.
- 그리고, 중국 주도로 일본, 한국, 아세안 10개 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도 참여하고 있다.

□ 사업환경은 중국보다 나은 수준

-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베트남의 사업환경(Doing Business) 지수는 발표년도 기준 2015년 189개 국 중 90위, 2016년 190개 국 중 82위, 2017년 190개 국 중 68위로 상승하는 등 사업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 부문별로는 건축인허가(20위), 자금조달(29위), 재산권등록(63위), 전기공급(64위)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사업청산(129위), 창업(123위), 수출입절차(94위) 관련 행정처리에는 아직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다.
-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아 경쟁력이 있으며, 아직은 부가가치가 낮은 사업도 투자가 가능한 수준이다.

- 2018년 4월 초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철강금속 3건 및 화학제품 2건 등 총 5건으로, 인도(29건)·인도네시아(7건)보다 적은 수준이다.
- 다만, 베트남의 기준 법인세율은 2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사회보장 기여 부담 등으로 인해 이익 대비 세금·준조세 부담비율이 38.1%로 동아시아·태평양(평균 33.6%)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 인도네시아

□ 민주화 진전으로 정치·치안 환경 개선

- 19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수하르토 체제가 붕괴된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다.
- 2004년 인도네시아 최초의 직선제 대선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하였으며 2014년 7월 대선에서 군부 권력층과 무관한 투쟁민주당의 조코 위도도(Joko Widodo) 후보가 53%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친서민적, 개혁적 성향에 따른 국민들의 지지로 2019년 임기 말까지 대체적으로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지지율은 취임 당시 75%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난으로 2015년 7월 40%대로 하락하였으나 2016년 8월 66.5%로 회복되었다. 2019년 4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할 계획으로 70% 내외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등 재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어 정치적 안정은 대체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로 2002년 이슬람 과격단체 제마 이슬라미야(JI) 주도의 발리 폭탄테러 이후 간헐적으로 테러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 테러방지법 제정, 경찰·군병력 배치 등을 통한 경계강화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이슬람국가(IS)의 자카르타 자폭 테러 및 동년 7월 IS 연계

조직원의 중부 자바주 자폭테러가 발생하는 등 불안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 테러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인도네시아 내 극단주의자의 테러 증가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 12월 경찰 대테러부대를 대폭 증원하는 등 치안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아세안 GDP의 36.8% 차지

-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2017년 GDP 규모는 아세안 최대인 약 1.0조 달러로 아세안의 GDP 2.8조 달러 중 36.8%를 차지하고 있는 아세안의 맹주국이며 주석, 니켈, 석탄, 천연가스 등이 풍부한 자원부국이다.
- 경제성장률은 2016년에 민간소비 회복 및 정부의 인프라 등 공공투자 증가에 힘입어 5.0%로 회복되었다.
- 201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소비 및 투자 증가와 함께 팜오일, 석탄,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5.1%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소비 및 투자 증가, 정부지출 확대 등 내수확대로 경제성장률이 5.3% 수준으로 전망된다.

□ 인도네시아 사업환경은 중국 추월

- 인도네시아의 사업환경 관련 Doing Business 지수는 과거 중하위권을 형성하였으나 2014년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집권 이후 외국인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발표연도 기준 Doing Business 순위가 2014년 189개 국 중 114위에서 2015년 189개 국 중 106위, 2016년 190개 국 중 91위, 2017년 72위를 기록하는 등 중상위권 수준으로 상승하며 중국(78위)을 추월하였다.
- 인도네시아 기준 법인세율은 25%로 역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이익 대비 세금·준조세 비율은 30.0%로 동아시아·태평양(평균 33.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2018년 4월 초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철강금속 4건, 화학

제품 2건 등 총 7건으로, 아시아 주요국 중 베트남(5건)보다는 많지만 인도(29건)보다는 훨씬 적은 수준이다.

- 또한 현재의 높은 교통물류비 부담도 향후에는 인프라 개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인도네시아 국민의 대부분이 무슬림으로 투자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극복해야 하며,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사업의 경우 사업성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인도

□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 정권 유지

- 2014년 5월 실시된 제16대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이 하원의석의 과반의석 이상(282석/총 543석)을 차지하여 10년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고 30년만에 단독 정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였다.
- 중도 우파 성향의 모디 정권 출범 후 관료주의 타파, 인프라 개발, 기업환경 개선 등 친시장 정책을 통해 경제구조 개편과 정부신뢰 회복을 꾀하고 있다.

□ 인도국민당은 주의회 선거에서 연승하는 등 2019년 총선 승리 전망

- 여당이 주도하는 전국민주연합(National Democratic Alliance)의 상원의석수가 과반수에 미치는 못하는 등 열세로 인해 모디 정권의 주요 개혁안들이 의회에 표류 중이다.
- 모디 정권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법 및 토지수용법 개정, 통합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GST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개정안은 상원 내 여당의 열세로 인해 상원 통과에 실패하였다.
 - 인도 상원의원 245명 중 1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233명은 2년마다 전체의 1/3씩 주의회의원에 의해 간접 선출되므로 상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 * 주요 정당 상원 의석수(2018년 4월 현재): 68석(인도국민당), 51석(인도 국민회의)
- 한편, 인도국민당 주도의 전국민주연합(National Democratic Alliance)은 2019년 5월 하원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어 개혁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인도국민당은 2018년 3월 트리푸라 주 등 동북지방 3개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하며 2019년 하원 총선에서 승리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세계 2위의 인구와 6위 규모 GDP를 바탕으로 고성장세 지속

- 인도는 약 13억 명(세계 2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엔경제사회국(UNDESA)에 의하면 2022년에 중국을 넘어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이 될 전망이다. 2017년 세계 6위 규모의 GDP(2.6조 달러) 대비 민간소비 비중 59%, 내수 비중 101%로 거대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중산층 인구 급증으로 내수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PwC(2012)에 의하면, 중산층* 인구가 2010년 1.7억 명에서 2021년 3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신흥 중산층** 인구도 4.7억 명에서 5.7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산층: 가계 연소득(INR) 300,000~850,000(달러: 5,614~15,907, 2012년 평균환율 53.44 적용)

** 신흥 중산층: 가계 연소득(INR) 150,000~300,000(달러: 2,807~5,614, 동일환율 53.44 적용)

- 2015년 기준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14세 이하 인구 비중이 각각 65.7%, 28.7%이며 생산가능인구가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풍부한 노동력 공급이 예상된다.
- 2014년 5월 중도 우파 성향의 모디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인프라 개발, 친기업적인 환경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인도는 2014~2016년에 이어 2018년에도 G20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할 전망이다(IMF)으로 경제규모는 2017년 세계 6위에서 2019년에는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5년 8%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16~17년에도 7% 내외의 성장세를 지속하였고 2018년에도 7.4% 수준으로 예상되는 등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 인도의 투자환경은 아직 열악한 편이나 정부의 개혁정책으로 개선 기대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17년 10월 발표)에 의하면, 인도의 기업경영여건은 조사대상 190개 국 중 전년 130위에서 100위로 상승하였다.
 - 소액투자자 보호(4위), 전기공급(29위), 자금 조달(29위) 등은 양호한 반면, 건축인허가(181위), 법적분쟁해결(164위), 창업(156위), 재산권 등록(154위), 수출입절차(146위) 세금 납부(119위) 등에서 행정처리 절차가 많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 2017~18년 글로벌경쟁력지수(GCI) 순위는 137개 국 중 40위이나 광대역 이동통신 가입자수(124위) 등 기술 준비도(Technological readiness) 부문 경쟁력은 107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인도의 인프라 부문 경쟁력은 조사대상 137개 국 중 66위를 기록하였으며 ICT 사용 비율이 낮은 수준이다.
 - 특히, 전력공급의 질(80위), 도로의 질(55위)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2019년까지 도로, 철도, 에너지 등 인프라 부문에 44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100명 당 광대역 이동통신 가입자수(124위), 광대역 유선인터넷 가입자수(105위) 등 인터넷 등 ICT 사용 비율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 제조업 활성화 정책인 'Make in India' 등을 적극 추진하여 해외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 자동차, 화학, 정보통신, 의약 등 총 25개의 제조업 분야를 육성하여 제조업 비중을 '15년 17%에서 '22년까지 25%로 확대할 계획이다.

- '상품서비스세(GST) 단일화 법안'이 2017년 7월부터 시행되는 등 개혁 정책 시행으로 해외투자유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높은 법인세율 등 세율이 높고, 반덤핑규제 등 수입규제가 많은 나라

- 현지법인과 외국지점에 적용하는 기본 법인세율은 각각 30%와 40%로 추가 부담금(Surcharge)과 교육세 부과에 따라 외국지점의 실질법인세율은 과세대상 소득이 1천만 루피 이하인 경우 41.20%, 1천만 루피 초과 및 1억 루피 이하 42.02%, 1억 루피(약 17.5억 원) 초과인 경우는 43.26%를 적용한다.
- 인도는 이익 대비 세금·준조세 비율도 55.3%로 동아시아·태평양 평균(33.6%) 및 남아시아 평균(43.0%)에 비해 높은 편이다.
- 1991년 이후 자유시장경제를 도입 중이나 여전히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인도는 2018년 4월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나라로 규제 건수는 화학제품(17건) 등에 대해 반덤핑규제 27건과 세이프가드 2건 등 총 29건을 기록하였다.

4. 아시아 주요국 진출환경 비교

□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사업환경과 정치·치안 환경은 중국보다 나은 수준

-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사업환경은 개선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사업환경보다 다소 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정치·치안 환경에서도 베트남은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아직 중하위권이나 두 번의 평화적 정권 교체 등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치안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어 정치·치안 환경이 개선 추세에 있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국 의존도(우리나라의 2017년 교역 비중 22.8%로 1위, 해외투자 누계 비중 14.8%로 2위) 축소를 위해 아세안과의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확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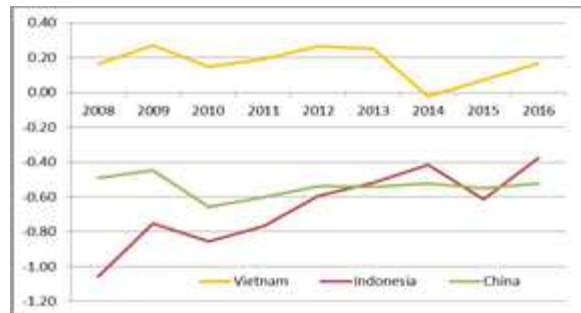
나갈 필요가 있다.

- 방법론적으로는 고소득국인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하고 ‘아세안-5’와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를 분리해 ‘아세안-5’에 대해서는 기업진출 위주로 접근하고, 저개발·저소득국인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과 함께 섬유·의류 등 노동집약적 사업 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림 7> 아시아 주요국의 Doing Business 순위 추이



<그림 8> 아시아 주요국의 정치·치안^{주)} 지수 추이



주: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자료: 세계은행.

-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비교해보면, 경제성장률은 베트남이 2014년 이후 6%대를 유지하고 있어 5% 내외의 인도네시아보다 높은 수준이나, 경제규모는 인도네시아의 GDP가 2017년 1조 달러로 베트남의 2,204억 달러에 비해 약 4.6배 수준이다.

<그림 9>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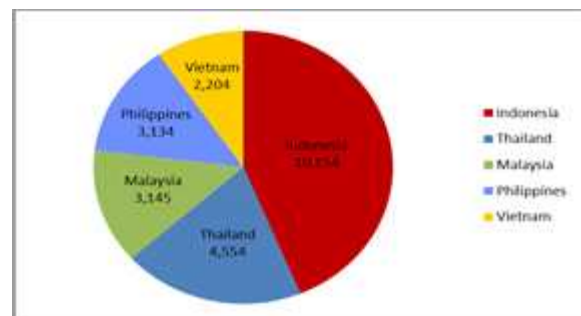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IMF.

<그림 10> 아세안 5개국의 2017년 GDP 규모

단위: 억 달러



- 인도는 사업환경과 정치·치안 수준이 걸림돌이나, 내수시장과 높은 성장률, 집권당의 2019년 총선 승리 전망 등을 감안한 진출전략 유효

- 인도는 열악한 사업환경과 낮은 ‘정치·치안’ 수준이 외국인투자 유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 Doing Business 지수는 발표년도 기준 2015년 189개 국 중 130위, 2016년 190개 국 중 130위, 2017년 190개 국 중 100위를 기록하는 등 아직 낮은 수준이며 정치·치안 수준도 전반적으로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상황이다.
- 사업환경 및 ‘정치·치안’ 수준 개선 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진출을 고려할 시장으로 분석됨. 기업 입장에서는 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설립·유지하면서 사업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2019년 5월 하원 총선에서 인도국민당 주도의 전국민주연합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모디정부의 개혁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인도는 대규모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어 내수시장 지향적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는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수도 있다.

IV. 아세안과 인도의 과제

- 아세안은 로힝야족 사태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정치외교적 이슈 해결에 한계 노출
 - 아세안은 회원국 간 민주주의·사회주의·군사정권 등 정치체제가 상이하고, 회원국간 소득 격차도 커서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미얀마의 약 46배 수준이다.
 - 종교적 이질성 또한 큰 편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남부) 등 해양국가는 종교적으로 이슬람 정서가 강하고,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대륙국가는 불교 정서가 강하다.
 - 아세안은 만장일치제와 내정불간섭 등 원칙 채택으로 아세안의 다양한 문화와 개발 수준의 차이를 아우를 수 있게 되었으나, 로힝야족 사태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회원국이 관련된 민감한 정치외교적 이슈 해결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 2017년 하반기 이후 로힝야족에 대한 정부군의 탄압으로 인해 약 70만 명의 로힝야족이 인근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갔다. 무슬림이 주류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개적으로 로힝야족 박해에 반대하고 있다.
 - 그러나 아세안은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고 미얀마 로힝야족 사태에 대해 국가별 입장이 상이하고, 전통적으로 회원국의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고 있어 동 사태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주도적인 대처가 미흡한 수준이다.
 - 또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이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을 포섭하고 있다.
 - 특히 아세안 내 중국의 동맹국으로서 캄보디아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아세안 같은 다자 포럼(multilateral forum)을 통한 해결보다는 양자 간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 2018년 4월 25~28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 초안에서도 캄보디아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우려 표명의 강도 완화를 시도한 바 있다.
- 한편, 베트남의 과제를 살펴보면 경제규모가 인도네시아의 21.7% 수준에 불과하고, 거시적으로는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지속과 함께 신흥개도국 기준으로는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58.2%로 다소 높아 재정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며, S&P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BB-로 아직 투자부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의 과제로는 경제성장률이 5%대를 유지하고 있어 6%대의 베트남에 비해 다소 낮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이기는 하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과 달리 경상수지가 GDP 대비 -2% 내외의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 인도는 취약한 보건·의료 부문 및 교육 부문 투자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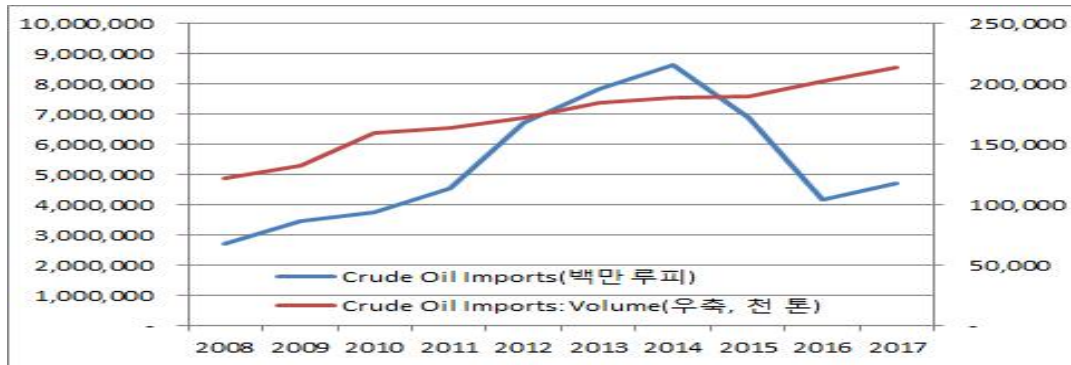
- 세계경제포럼의 2017~18년 글로벌경쟁력지수(GCI)에 따르면 보건·의료 부문이 취약하여 10만 명 당 결핵 발생건수(116위), AIDS의 사업상 영향(113위), 신생아 천 명당 유아 사망자 수(112위), 결핵의 사업상 영향(109위), 기대수명(104위) 등 전반적으로 보건 부문이 하위권(104위/137개 국)을 기록하고 있다.
- 2015년 기준 인도(2014년 기준)의 학생-교사 비율은 조사대상 111개국 중 104위로 최하위권이며, 2013년 기준 인도의 GDP 대비 정부의 교육 지출 비중은 조사대상 117개 국 중 84위로 하위권을 기록하였다.

□ 유가상승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 등에 따라 인도 경상수지 적자 확대 현상 재발 조짐

- 상품수지 적자는 2012년 2,015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나 이후 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수입 감소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1,07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유가 회복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 등으로 1,446억 달러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 인도는 2016년 기준 세계 3위의 원유소비국으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원유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원유 수입금액은 회계년도 기준 2014년 8.6조 루피에서 2016년 4.2조 루피로 급감하였으나 2017년에는 4.7조 루피¹⁾로 증가하였다.

< 그림 11 > 인도 원유 수입액 및 수입량 추이



자료: 인도 Ministry of Petroleum and Natural Gas

-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및 경상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 경상수지 적자는 2012년 878억 달러에서 2016년 153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나 2017년에는 유가 회복에 따른 원유 수입액 증가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는 512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2012년 -4.8%로 확대된 이후 경상수지 적자 축소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에는 -0.7%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2017년에는 상품수지 적자 확대에 의해 -2.0%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지역연구팀
 선임조사역 김찬수(02-6255-5704)
 avik@koreaexim.go.kr

1) 약 686억 달러.